‘헌것 줄게 새것 다오’…1석2조 ‘재활용 짠테크’ 인기

환경 살리고 혜택 챙기고…고물가에 광주 행정복지센터 이용 부쩍 증가
새 건전지·종량제봉투·화장지 교환 등 시민 호응에 지자체 예산 소진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지역민이 늘고 있다.

투명 페트병과 우유팩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모아가면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으로 교환해 주는 지자체의 환경정책을 이용해 생활비를 아껴보겠다는 일명 ‘짠테크’의 하나다.

2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과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 주는 사업이 10월 종료 됐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북구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 됐지만 정착이 잘 되지 않고 있어 투명페트병 30개를 모아오면 10ℓ 종량제 봉투 한장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북구에서 투명 페트병은 2022년과 2023년 4t 수거에 그쳤지만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이 돌면서 올해 10개월만에 8t이 모여 종량제봉투 구매 예산(500만원)이 모두 소진됐다.

이 뿐만 아니다. 종이팩 1kg을 모아오면 두루마리 휴지 2개로 폐건전지 3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준다. 종이팩도 2022년 66t에서 2023년 102t, 올해는 56t이 모였으며 폐건전지는 2022년 42t, 2023년 50t, 2024년 37t이 수거됐다.

실제 이날 오후 찾은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계단 한켠이 우유팩과 투명 페트병, 건전지가 담긴 박스로 가득 차있었다.

일주일마다 수거차량을 통해 한주간 모은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데, 한 주가 시작된 첫 날임에도 주민들이 가정에서 모은 재활용품을 한가득 들고 왔기 때문이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도 재활용쓰레기 교환을 하려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늘고있다.

2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있는 재활용품들.

동구와 남구는 종이팩 1kg당 두루마리 휴지 2개를 제공하고 폐건전지(동구 0.4kg, 남구 0.5kg)도 새 건전지로 바꿔준다. 서구에서는 종이팩(200㎖ 100개, 500㎖ 50개, 1000㎖ 35개)을 종량제 봉투(10ℓ 1장) 또는 두루마리 휴지 2개 중 선택가능하고 , 폐건전지 20개와 새건전지 2개를 교환할 수 있다.

광산구는 포인트제를 사용해 건전지는 개당 3포인트, 화장지는 200㎖당 3포인트를 제공한다. 100 포인트당 건전지와 화장지 중에서 1개씩 지급받을 수 있다.

북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지난 2022년 교환정책으로 수거된 종이팩은 57.32t이었지만 지난해 61.44t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8.8t이 교환됐다. 폐건전지도 지난 2022년 48.82t이 수거돼 새로운 건전지로 교환 됐지만 지난해 60.93t까지 늘었다.

지역민으로서는 생활필수품 구매비용을 한푼이라도 아낄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북구 주민 이용태(76)씨는 “다 쓴 물건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건전지 등을 거저 얻을 수 있어 적극 참여하게 됐다”며 “하나하나 모으는 게 번거롭긴 해도 티끌모아 태산이다. 헌 것주고 새 물건 받아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행정복지센터가 교환을 위해 마련한 휴지 200여개는 일주일이면 동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설명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은 자치구별 위탁처리업체로 넘겨져 투명페트병은 섬유나 솜 등으로 재탄생한다. 외국에서 펄프를 수입하지 않고도 종이팩으로 화장지를 만들 수 있고, 중금속이 함유돼 분리배출 하지 않고 소각하면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도 있는 폐건전지의 경우 망간과 아연 등이 추출돼 100% 회수된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도로 아닌 배수로 상판서 차량 추락했다면?

광주지법 “적극 대처 미흡…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도로가 아닌 배수로 상판에서 달리던 차량이 추락하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도로가 아니어도 차량이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통행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민수)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에 3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20일 오후 6시께 승용차를 렌트해 도로 옆 상판이 덮혀있는 ‘ㅁ’자형 수로관 250m를 주행하다 끝 지점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렌트수리비만 1300여만원이 나왔다.

이에 A씨는 렌트카 업체에 지급한 1300여만원의 승용차 수리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2300만원을 제주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차량이 진행한 구간은 오르막이라 낭떠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고, 경고표시나 차단시설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배수로를 도로로 볼 수 없고 사고지점에 방호석이 설치돼 있었다.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수로 끝 지점에 낭떠러지가 있는 점에 비춰보면 지자체가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사고방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물적 손해만 발생한 점에서 제주도 책임은 30%만 인정되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루이뷔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리폼업자 2심도 패소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도 명품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 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00만원을 루이뷔통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은 A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들 화재 대피훈련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화재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농수로에서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나주에서 80대 노인이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나주시 동강면의 한 농수로(깊이 1m)에서 A(여·8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가족들은 A씨가 귀가하지 않자 행방을 찾아 다닌 끝에 집 근처 농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 진술을 토대로 치매를 앓고 있었던 A씨가 집 근처를 배회하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